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쟁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한주희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애머스트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들어가며

미국을 비롯,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들—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은 2016년 2월 4일, 7년간의 협상 끝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TPP는 무역 및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인터넷,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 모두 30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후인 2018년 2월 4일까지 12개 국가 모두 국회비준을 통과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이들 가운데 6개 회원국이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하고 이들 6개 국회비준 통과 회원국 GDP가 총 12개 국가 GDP의 8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TPP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일부는 TPP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TPP의 노동 쟁점들과 관련한 백악관 발표자료,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보고서, 노동계 발표자료들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백악관 주장

오바마 행정부는 TPP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러일으킬 경제적 기대효과를 대통령 직속 미 정부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¹⁾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수출품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확대 효과

TPP는 회원국에서 현재 주로 관세 형태로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18,000여 개 세금을 철폐한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 목장주와 농부들을 포함한 미국 노동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관련 상품, 농축산품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을 다음과 같이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산 자동차: TPP는 회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70%까지 철폐할 것이다. 2014년에 TPP 회원국 수출규모는 총 89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미시간 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엔진은 TP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최대 55%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TPP가 발효되면 관세가 0이 된다. 또한 TPP 협정의 일부로, 대일본 무역에서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없애 미국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이 일본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 미국 정보통신기술 제품(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PP는 회원국에 수출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수입관세를 최대 35% 철폐할 것이다. 2014년 한 해 스마트폰, 라우터, 컴퓨터 등 이들 제품의 회원국 수출규모는 360억 달러에 달했다.

1) 대통령 직속 미 정부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Overall U.S. Benefi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Overall-US-Benefits-Fact-Sheet.pdf>. 항목별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ustr.gov/tpp>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농축산물 : TPP는 회원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현재 TPP 회원국에 대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출은 미국 내 농가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관세 인하로 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농가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미국산 가금류 제품의 관세를 40%까지, 콩 제품의 관세를 35%, 과일 제품 관세의 경우 40%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미국산 농축산물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되어, 미국 농축산물의 50% 정도가 일본에 면세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항 포함

TPP는 무역 역사상 가장 강한 노동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TPP는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이 명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을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한다.

TPP를 통해 도입하게 된 전적인 강제력을 가진(fully-enforcible) 노동조건들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약권, 미성년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작업장 안전,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같은 납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차별 금지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껏 미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보호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TPP는 이러한 필수 노동조건들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도입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았던 상황을 극복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PP는 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권을 최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실제로 TP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의 재협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수익 명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ILO 노동기준을 적용시킴에 따라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방안 포함

TPP는 무역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무역장벽 때문에 대부분 그들이 생산한 미국산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국 기업의 98%는 중소기업의 기업이지만 이들 소규모 사업체 가운데 단지 5% 정도만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95%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세계의 여러 소비자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높은 세금과 복잡한 서류절차, 관세, 물류 서비스 부족 등이다. TPP는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TPP는 해외수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들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생산품을 저가에 더 쉽고 빠르게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 상거래 장려, 디지털 자유 보호, 공개 인터넷을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

TPP는 인터넷 기반 상거래를 확대·증진하는 최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상거래는 세계시장의 가장 큰 성장 기회이자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야이다. TPP는 무역장벽이나 검열제도 대신 디지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혁신을 도입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TPP는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TPP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하고, TPP 회원국에 속한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저장, 이동, 접근과 저렴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한다. TPP는 또한 현재 특정 국가의 정부가 자신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데이터, 서버, 연구기관을 자신의 영토 안에 두게 하는 등 제한 조건을 통해 강제된 지역화(forced localization)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TPP는 국경을 넘는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 디지털 자유를 보호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 접속, 이동할 수 있

도록 하고 사이버 범죄나 스팸행위 근절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들을 포함한다.

회원국들의 국영기업 보호 철폐

TPP는 회원국들의 국영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보호한다. 이들 국영기업들은 종종 정부 지원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 TPP는 이들 국영기업들이 상업적 기반하에 경쟁하도록 하는 징벌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경우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수출 최우선시

TPP는 소규모 기업들을 포함, 미국의 기업들이 소매업, 커뮤니케이션, 물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복잡한 규제들과 금지조항들을 철폐한다. 따라서 현재 미국 노동자 가운데 80%를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TPP 회원국들이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자신의 국가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신설했다. 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종류가 전자결제 서비스든 아니면 엔지니어링 서비스든 간에 상관없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데, 이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업을 하는 해당 국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원격으로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TPP의 긍정적 경제효과 주장과 달리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TPP가 사실상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²⁾를 지난 4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PP의 노동 관련 쟁점

TPP가 미국인 대다수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첫째는 TPP가 과연 향후 가계, 기업, 정부의 소비/지출 인상을 통한 총수요(aggregate demand) 증가와 더 활성화된 노동시장(tighter labor market)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TPP를 통해 지금처럼 기업 관리자들과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 구조가 아닌 중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무역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TPP 통화조항과 총수요 증가의 관계

지속적인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역적자 해소이다. TPP에 강력한 통화조항(currency provision)이 포함되지 않는 한, TPP가 시행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TPP에 통화조항이 포함될 경우 이들 조항 때문에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불황과 싸우기 위한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7년 경제위기 이전 30여 년 동안 대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위원회의 단기 이자율 조정으로 완전고용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당시에는 무역적자가

2)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 2015년 4월 16일,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Unlikely to Be a Good Deal for American Workers", <http://www.epi.org/publication/tpp-unlikely-to-be-good-deal-for-american-workers/>

총수요(aggregate demand)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연방준비위원회가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이후 7년 이상이나 불황을 경험했다. 더욱 부정적인 상황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완전회복을 더디게 했던 수요 부족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가 미국의 경제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앞서 논의한 대로 완전고용 상태가 아닌 경제상황을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역 흐름이 총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02년 이후의 미국 무역적자는 주로 무역 상대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자국의 통화가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환율을 조정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자산을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싼 값에 외국 생산품을 수입하고 미국 수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된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들이 이러한 환율 조정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달러 환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을 TPP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TPP에 이러한 환율 및 통화정책과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통화 및 환율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TPP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TPP에 이를 포함시키면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불경기에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는 등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방준비위원회의 기능을 불경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며, 반대로 연방준비위원회나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 원하는 다른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불경기 회복정책 수행에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율/통화 조정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적완화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신이 생산하는 예비비(reserve)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연방준비위원회가 미 재무부 발행 채권과 모기지 기반 증권(MBS: Mortgage-Based Securities)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연방준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권한을 판매자인 미 재무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이들 재무부 채권과 모기지 기반 증권에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낮아진 이자율은 이어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외 생산품 가격을 높게 유지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완화의 주요 목적은 국내 이자율 조정에 있으며, 연방준비위원회가 매입한 자산은 국가의 재정당국이 통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거래된다.

반대로, 중상주의 환율정책을 일컬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재정당국이 외국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채권과 모기지 기반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산 대비 중국 자산에 대한 상대적 수요에 변화를 가져와 미 달러-중국 위안화 환율에 변동을 가져온다. 요약하면, TPP에 한 국가의 재정당국이 매입할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자산 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환율/통화 조항을 둔다고 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불경기에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TPP, 세계화, 임금인상 효과의 관계

이제껏 세계화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불평등 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알려져왔다. 1990년대 체결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세계화가 임금인상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열띤 토론 주제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료들을 재평가한 결과,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불평등을 더욱 촉진한다는 결론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TPP와 같은 무역협정 체결에 호의적이다. 그들은 세계화가 과거에 대다수 미국인들의 임금인상을 막는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미국 시장이 이미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손해는 거의 최소한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미국 시장에 비해 다른 국가들의 시장이 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협정은 미국 수출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함묵적인 내용은 미국이 이전의 무역협정의 결과 발생한 역진적인 재분

배(regressive redistribution)로 인한 고통 없이 전반적인 국민소득 증대의 효과만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무런 고통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역을 통한 이익과 역진적 재분배(regressive redistribution)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중요한 것은 무역장벽이 완화됨으로써 전체 국민소득 측면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원천은 낮아진 무역장벽이 발생시키는 역진적 재분배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구조를 노동집약적인 수입경쟁 부문에서 자본 집약적인 수출가능한 부문으로 재편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무역협정은 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제품의 국내 가격을 낮춘다. 이어서 이들 수입제품과 경쟁하는 국내생산 제품의 가격은 동반해서 하락한다. 여기서 프로세스가 끝난다면 모든 소비자들은 혜택을 본다. 미국 노동자들은 전기나 의류 등 수입제품 또는 수입경쟁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하게 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어 물가를 조정한 수입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프로세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로 변화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국내생산 수입경쟁 제품 및 수입품의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보지만, 동시에 이들 제품의 국내 생산자들은 반대로 생산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다. 다른 한편으로 수출경쟁 제품의 경우, 무역협정은 국내생산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 생산자들은 해외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이들 생산품의 국내 가격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해 미국인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수입한 미국 생산품을 구매하는 더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해외 생산품과 경쟁하는 미국 수출품 가격의 상승분은 다시 물가 조정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넓어진 무역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전체적인 이익을 상쇄하게 된다.

이에 더해, 수입경쟁 제품의 가격 하락과 수출경쟁 제품의 가격 상승의 조합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원의 균형을 수입경쟁 부문에서 수출경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 실제 화폐 단위에서, 수입경쟁 부문의 자원 축소는 수출경쟁 부문의 자원 확대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문제는 수출경쟁 부문에서 100달러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입경쟁 부문에서 100달러치를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자본이 그러나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데 비해 다수의 무역 교류국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비해 노동은 비싼 상황이며, 이는 미국의 비교우위가 수입하게 되는 노동집약적 생산품이 아닌 주로 수출하게 되는 자본집약적인 생산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생산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는 데 반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은 증가한다.

무역 흐름이 미국과 교역국들 사이의 자본과 노동의 양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면 무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수입품 및 수입경쟁 제품의 가력 하락으로 인한 이익)은 무역이 발생시키는 역진적인 재분배 현상과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무역 확장으로 인해 국내 생산구조가 수입경쟁 제품에서 수출경쟁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대다수의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불평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국내 생산구조가 재편되지 않을 경우 TP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게 된다.

“무역을 통해 미국은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앞선 예에서, 미국은 무역협정의 결과 더 많은 수출경쟁 부문의 일자리(예를 들면, 항공산업의 일자리)가 발생하는 데 반해 수입경쟁 부문의 일자리(예를 들어, 의류가공업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항공산업 일자리의 임금이 의류가공업 일자리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 좋은 일자리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일자리에 생기는 현상과 노동자들에게 생기는 현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역 확대로 고임금 부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양쪽의 모든 부문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항공산업의 고임금 일자리는 단지 고용된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제학 표준 모델은 국내 생산구조 재편이 다양한 미국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세계화가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세스는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표준 모델들은 경쟁 노동시장(competitive labor market)을 가정하고 있

기 때문에 수입경쟁 생산품 중심에서 수출경쟁 생산품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수입경쟁 부문의 노동자 수요 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만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노동자의 협상력이 임금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중요하다. 무역 확대가 특정 직군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임금 협상력 또한 감소시킨다면 표준 경제학 모델이 짚어내지 못한 임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 노동계 입장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노동조합회의(AFL-CIO)³⁾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오바마 행정부에 1%의 미국인이 아닌 나머지 99%를 위한 무역정책 개선책을 제안했으나 이들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 TPP 협의는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환경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지도 못할 것이다. TPP는 근로자 가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반면, 글로벌 기업들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준 NAFTA를 모델을 따라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TPP의 주요 옹호자들—주로 대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은 이 무역협약이 황금기준이라고 자랑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환태평양 국가 내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강화,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내용 또는 일관적 계획(consistency plans)이라고 불리는 기타 합의사항 어디에도 TPP 회원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어디에도 실질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권과 환경보호 실행 향상과 관련한 조항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조차도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포함

3) AFL-CIO,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Agreement (TPP)”, <http://www.aflcio.org/Issues/Trade/Trans-Pacific-Partnership-Free-Trade-Agreement-TPP>
TPP의 영향력에 관한 AFL-CIO의 상세 보고서는 “Report on the Impa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를 참조(<http://www.aflcio.org/Issues/Trade/Trans-Pacific-Partnership-Free-Trade-Agreement-TPP/Report-on-the-Impacts-of-the-Trans-Pacific-Partnership>).

된 강제조항들도 차기 정권의 재량에 의해 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현존하는 무역협정에서 이미 적절하지 않다고 판명된 노동협약(labor commitment)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이번 TPP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를 위한 내용 또한 거짓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TPP는 외국 투자자와 독점 제약회사들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엄격한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TPP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발생하는 이익을 경제 엘리트들에게 돌리는 데 비해 TPP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손해—일자리 사라짐, 저임금, 노동권 억압—는 결국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미통신노조⁴⁾

미국의 최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노조인 전미통신노조(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는 TPP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들을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 콜센터와 기타서비스 부문 일자리들이 위협에 처해질 것이다. TPP는 해외투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규정과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서비스 부문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콜센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회계, 의료진단 등 서비스 직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가속화할 것이다.
- TPP는 영구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사실상 TPP는 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이동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TPP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달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실패한 극단적인 정책에 얽매이게 된다. 또한 TPP는 추가가입 형식을 의도하고 있어,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에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환태평양 국가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2012년 12월 추가적으로 가입했고, 일본은 그 직후에 가입했다.

4) 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10 Ways The Tpp Would Hurt U.S. Working Families”, http://www.cwa-union.org/pages/10_ways_the_tpp_would_hurt_cwa_represented_workers

- TPP는 미국인의 세금으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더 많은 기업들에 미국 연방정부의 납품/조달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재생가능한/재생된(renewable/recycled)” 또는 “노동착취로부터 자유로운(sweat-free)”,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적정임금 등의 조항은 사실상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 자국 또는 자국에서 관리하는 기록상에서 노동자들이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될 리 없다.
- TPP 회원국 기업들은 텔레콤, 의료, 환경과 관련한 국내법 및 규제들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TPP는 국내법과 규제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특별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법률이 자신의 기대수익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인들의 세금을 통해 그 차익을 보상하도록 직접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
- 노동자의 임금, 혜택, 단체협약권 등이 약화될 것이다. 무역협정이 임금수준 및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 수준을 하락시키고 단체협약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TPP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는 대신 기업들의 권리를 확장함으로써 노동기준에 관한 아래로의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 생산적인 국내투자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대신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투기자본의 유입을 막는 자본통제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금융기업들이 계속해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준, 규제, 법률이 외국 정부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다. TPP에서는 현재 미국의 식품 기준, 라벨링 프로그램, 특정 살충제 규제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 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KLI**